

(...8페이지에 이어)
리화하러 통계를 왜곡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탈원전도 그 한 사례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대신 탈원전이란 정치적 목표를 먼저 설정해놓고 데이터를 꺾었다. 정부 지침을 받은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연장 운영의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경제성 평가를 억지로 축소해 가공의 수치를 만들어 그것을 근거로 폐쇄 결정을 내렸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한국의 원전 산업은 급속도로 쇠락하고 원전 생태계가 붕괴하는 결과를 낳았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의 여파로 지난 2018년 1분기의 소득분배 지표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그런데 정부는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통계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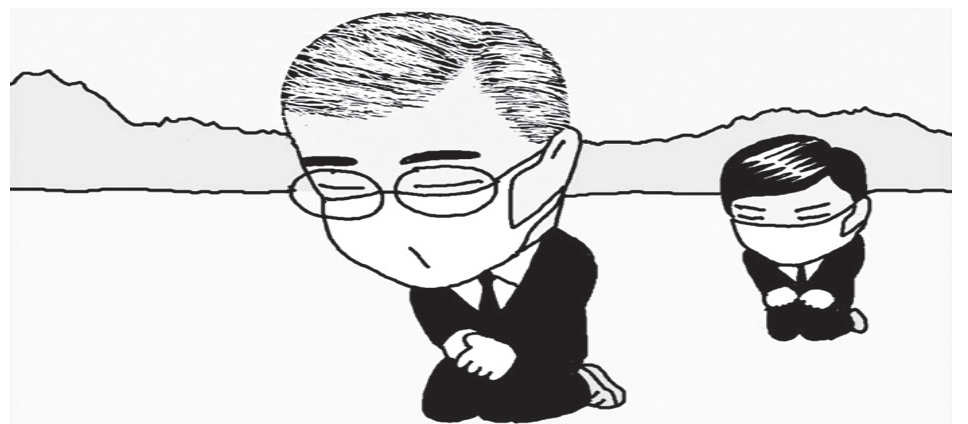
사지'에 나섰다. 가구원 중 근로자만 따로 추려낸 소득 통계를 만들어내고는 문 대통령까지 나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우겼다. 그 결과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은 그다음 해에도 이어져 고용 참가가 계속됐다. 일자리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부풀리려 세금을 퍼부어 노인 알바, 청년 임시직을 양산하는 현실 왜곡을 거듭했다. 질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일회성 일자리에 수십조원 세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부동산 정책이 집값 급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모든 수치와 지표가 정책 실패를 말해주는데 국토부 장관은 서울 집값 상승률이 "3년간 11%"라고 우기며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리한 것만 뽑아다 쓰는 통계의 자의적 활용은 정책 전환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세

금 폭탄, 대출 조이기 같은 규제 일반도의 부동산 정책이 3년 내내 이어지도록 했다. 그 결과 23차례나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을 역대 정권 최악으로 급등시키고 전·월세 대란과 서민 주거 불안을 초래하고 말았다. 통계의 취사선택이 부동산 정책의 참담한 실패를 낳은 것이다.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하다 들들나 국가부도를 맞았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조작하고 빈곤율 등 불리한 통계수치를 감추다 국제 사회의 신뢰를 잃고 '부실국가'로 낙인찍혔다. 우리도 20여년 전 외환 위기 당시 단기외채 급증, 외환보유액 급감 등 적신호가 켜졌음에도 보고 싶은 지표에만 매달리면서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우기다 사태를 키웠다. 통계 분석은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무릎 사죄



1970년 12월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 추념비 앞에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섰다. 독일 정상으로선 전후 첫 방문이였다. 겨울비가 내렸고, 몇몇 성직자와 사진기자가 주변을 에워쌌다. 그때 화환을 놓은 브란트가 털썩 무릎을 꿇었다. 예정에 없던 갑작스러운 행동이였다. 57세 브란트는 머리를 숙이고 30초쯤 침묵 속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것이 뒷날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게 된 '바르샤워 크니 팔(바르샤바 무릎 꿇기)'이다.

▶브란트는 "나는 역사의 무게 앞에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하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나치 수용소 생존자인 폴란드 총리가 감동을 받아 차 안에서 브란트를 끌어안고 울었다고 했다. 헝가리 방송은 "브란트가 무릎을 꿇었지만, 독일 민족이 일어섰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서독 언론은 비판적이었

다. 여론조사 응답자 48%가 "브란트 행동이 과장됐다"고 비난했다.

▶세월과 함께 평가는 완전 달라졌다. 이젠 '20세기 독일 정치사에 힘과 용기와 아이를 보여준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브란트와 비슷한 '무릎 사죄'는 2015년 8월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가 옛 서대문형무소를 찾았을 때 있었다. 그는 추모비에 헌화한 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다. 그는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죄한다"고 했다. 3년 뒤 하토야마는 경남 함천에도 찾아가 팔순 원곡 피해자들 앞을 일일이 무릎으로 옮겨 다니며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근년 들어 '무릎 사죄'가 드문 풍경은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때 여론이 급락하면 지역으로 달려가 단체로 무릎을 꿇는다. 뒤에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현수막도 걸어놓는다. 노무현 정부 때

는 탄핵 가결을 못 막았다며 열린우리당 의장이 무릎을 꿇었다. 물류 창고 화재 때도 모 텔런트의 '위안부 누드' 파문 때도 책임자가 무릎을 꿇었다. 갑질 손님 앞에서 백화점 점원이 무릎 꿇고 사죄하는 영상도 있었다.

▶그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을 찾아 무릎을 꿇었다. 검은 옷 차림에 흰 장갑 손을 앞에 모았다. 인상적인 사진이였다. 그는 "부끄럽다" "죄송하다"를 거꾸 말하다 목이 뻐다. 일어설 때 잠깐 비틀거렸다. 5·18 무릎 사죄는 지난 40년간 보수 정당 대표로는 처음이다. 민주당은 '화제 전환용 쇼'라고 했지만, 김 위원장은 "반성의 첫걸음을 땀"이라고 했다. 복잡한 일도 훗날 사진 한 장으로 요약될 때가 있다. '무릎 사죄'는 전제 조건이 없다는 뜻이다. 평가는 시간과 실천에 달렸다.

대통령이 칭송한 '항일 영웅'

보훈처 조사에선 '친일파'

국가보훈처의 '독립 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는 작년에 시작됐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가짜 독립 유공자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호응하는 형식이였다.

보훈처는 그해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2019년 7월까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식 발표가 이뤄져 왔다. 정부 관계자는 "독립 유공자 서훈까지 받은 분들의 삶을 다시 재단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다"고 했다.

1년 동안 발표를 미뤘던 보훈처는 지난달 21일야 행 정안전부에 일부 인사에 대한 서훈 취소를 요청했다가 또다시 보류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가 부담됐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거론하며 "홍범도·최치동 장군이 이끈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에서 '독립전쟁 첫 번째 대승리'를 거뒀다"며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광복군의 뿌리가 독립군이었고, 국방부는 독립군과 광복군을 국군의 기원으로 공식 확인했다"고 했다. 최 장군이 독립군을 이끌었으며, 국군의 모태가 됐음을 천명한 것이다.

문제는 최 장군의 친일 의혹이 이미 수차례 공개적으로 거론됐다는 점이다. 최 장군은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하지만 1937년

여권의 친일몰이와 각종 구설

- ▲김원웅 광복회장 "애국가 폐지, 이승만 역적, 백선엽 사형감" 발언 → 본인의 공화당·민정당 전력 논란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일본 이익에 편승하는 우리 척결" → 일본차 렉서스 보유 사실 드러나
- ▲조국 전 민정수석 한·일 갈등 국면에서 '죽창가' 언급 → 정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하려다 외교 갈등

중·일 전쟁 이후 친일파가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 측은 강력 반발했지만, 일본군 토벌대의 선두가 돼 항일 무장 세력 진압에 앞장섰다가, 일제에 거액의 국방헌금을 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중현 의원은 "보훈처가 최 장군에게 친일 이력이 있음을 조사·판정하고 있는 와중에 청와대는 대통령 연설문에 최 장군 칭송 내용을 실었다"며 "현 정부의 친일 몰이가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이뤄진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유족 측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보류한 것"이라며 "대통령 연설문에 나왔다고 보류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조사에선 현대 소설의 거장인 A 소설가의 아버지의 친일 행적도 나왔다. A 소설가 유족들은 보훈처의 서훈 박탈 판정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의 '친일 몰이'가 결과적으로 자충수가 된 사례는 적지 않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엔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출연하는 유튜브 방송 홍보물에 일본 만화 캐릭터 '

독수리 5형제'가 등장했다. "평소 '노 재팬'을 외치던 의원들이 일본 만화로 홍보를 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최근 친일 청산을 앞세워 "이승만 전 대통령은 역적, 백선엽 장군은 사형감"이라며 애국가 폐지까지 주장했다. 하지만 본인이 과거 공화당·민정당 당료로 일한 전력이 드러나 독재 부역 논란에 휩싸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은 친일 척결을 하자며 페이스북에 죽창가까지 올렸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지난 3월 총선 국면에서 일본차 렉서스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이끈 정선대문제대책협의회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에서 벌인 워크숍 뒤풀이에 일본 과자 봉지가 등장해 논란이 됐다.

정부는 작년 8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한·미·일 삼각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으로부터 직간접적 압박을 받았고, 결국 석달 만에 종료를 유예했다.

하마터면 속을 뻘뻘했다

'조국 사태'가 없었다면? 반칙과 위선은 숨겨지고 조국은 대권 가도를 질주하고 있었을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 정치를 재개한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 만약 '조국 사태'가 없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랬다면 온 국민이 분노할 일은 없었겠지만 조국의 실체가 탄로 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반칙과 특권으로 가득 찬 그의 내로남불 위선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쯤 그는 국회에 입성했거나 중책을 맡아 대권 가도를 질주하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 워낙 상품성이 좋은 데다 친문의 열렬 지지를 받고 있으니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것쯤은 일도 아닐 것이다. 여세를 몰아 2년 뒤 대선을 치른다면? '조국 대통령'이 현실화된다면? 생각만 해도 대한민국엔 악몽이 아닐 수 없다.

무능한 좌파일 수는 있겠지만 순수성만큼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앞 정권 같은 독선과 불통, 비민주적 국정 독주는 없을 것임을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오산이였다. 믿음과 기대는 차례 차례 깨져나가 이젠 남마조각처럼 너털너털해지고 말았다.

3년 전 취임사에서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청산을 맨 첫 번째로 약속했다. 탈권위를 내세운 정부에서 권력은 집중되고 대통령은 우상화되었다. 대통령 부부를 향한 여권의 끝없는 찬양은 '여기가 북한이냐'는 소리가 나올 지경이 됐다. 문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을 끝내겠다고 했다. 이른 통합을 말했지만 편 가르기와 내 편 챙기기에 역대 정권 최고였다. 민주화 투쟁을 훈장처럼 내세우는 정권에서 민주주의는 상투투성이 됐다. 불통과 오만,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정 독주는 신(新)독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약자 편이라더니 약자를 못 살게 하는 정부였다.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빈부 격차를 오히려 키우는 정책으로 치달렸다. 법 앞의 평등을 말하더니 실상은 법치의 파괴자였다.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선거 개입했다는 혐의까지 나왔다. 권력기관을 정치에서 독립시키겠다고 하면서 검찰을 장악하려 온갖 무리수를 서슴지 않았다. 페미니즘 대통령이라더니 자기 편의 권력형 성폭력엔 끝내 눈감았다.

이 모든 역주행의 공통점은 의도된 것이란 점이다. 무능이나 실수가 아니라 계산된 선거공학의 결과다. 이념을 우선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내 편을 챙겨야 선거에 유리하다 보기 때문이다. 정권 출범 때 내세웠던 모든 약속이 허물어졌다. 애초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는지 모른다. 우리가 알던 정권, 우리가

생각하던 그 대통령이 아니었다. 국민보다 진영, 국익보다 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키는 정권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트렸다. 불로소득을 증오하는 정권이니 부동산만은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부동산 안정과 거꾸로인 정책들이 3년 내내 이어졌다. 마치 집값을 올리려 작정이라도 한 듯했다. 여당 정치인들은 "집값 안 떨어진다" "집값 올라도 문제없으니 세금만 잘 내라" 운운하며 숨겨진 본심을 드러냈다. 이제 국민은 집값을 잡겠다고 말은 허언(虛言)이었음을 깨닫게 됐다. 부동산 문제조차 계급정치를 우선하는 반(反)서민 정권임을 알게 됐다.

문 정권의 눈속임 국정은 좀 더 오래갈 수도 있었다. 역설적으로 총선 압승이 정권의 실체를 양당겨 폭로해주었다. 176석에 취한 권력이 최소한의 자제력마저 잃어 버린 탓이다. 국회 상임위를 독식하고, 논란 많은 악법을 심의 없이 밀어붙이고, 검찰총장 뽑아내기에 올인했다. 어떤 여당 중진은 검찰이 '대통령의 충견(忠犬)'이라야 한다고 했다. "세상 바뀐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겠다"는 협박까지 나왔다. 이들의 세계관은 군사독재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도장치 없이 오만으로 치달린 결과 제풀에 정체를 실토하고 말았다.

3년여의 국정 사기극으로 나라 꼴은 엉망이 됐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많은 국민이 진실을 알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다. 문 정권이 더 치밀했고 조심했다면 5년 내내 국민 눈을 가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국운(國運)이 다하지 않은 모양이다. 하마터면 속을 뻘뻘했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박정훈



SL Dental Centre on 4th ST

(previous Killarney Dental Clinic owner)

한인 치과의사 산 리 Sean Lee

Tel: 403-228-5367 / Fax: 403-229-2876

website: www.sldentalcentre.ca

email: mission@sldentalcentre.ca

SL DENTAL CENTRE: 1000 Mission Professional Bldg
2303 4th Street SW, Calgary, Alberta T2S 2S7